

주차문제로 야기된 이웃 갈등, 언론보도로 확대돼

김 문 성
조사팀 차장
(서울제1중재부 조사관)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은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문제다. 이웃간 분쟁이 사회문제화 된 이면에는 ‘이웃 사촌’으로 대변되던 공동체 문화가 무너져버린 각박한 현실이 차고 앉아 있다.

층간소음이 등장하는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처럼 긍정적인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얼굴 붉히기 싫어 참고 사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분쟁은 때론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기도 한다.

최근 주차문제로 야기된 이웃간 분쟁을 다룬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서울의 한 부촌. 담을 맞대고 사는 두 이웃이 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명문가이고, B씨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명문가이다. 이들의 갈등은 공유하고 있는 소방도로 주차문제에서 비롯되었다.

A씨 쪽에서 후문과 연결된 소방도로에 주차하면서, 소방도로와 주차장이 붙어있는 B씨 주차에 불편함이 발생하자 B씨는 소방도로에 주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담을 쌓으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래전부터 담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주차갈등으로 이웃간 편이 갈리고, 당사자와 측근 간 폭행시비가 오가는가 하면, 인터넷 언론간 대리전으로 번졌다.

A씨 편에 선 인터넷 언론에서 주차문제를 확대해 B씨의 정치·행정적인 자질을 들먹이고, 급기야 리모델링 주택의 호화성, 불법성 문제까지 거론하였다. 이에 B씨에게 우호적이던 인터넷 언론은 A씨가 타인명의로 부동산 수 십 채를 소유한 재벌이라며 그의 재산 문제를 보도하고, A씨를 옹호한 인터넷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이 싸움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급기야 수 건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졌고, 일부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차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중재부는 A씨 편에 선 언론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공인의 자질이나 행정능력 등과 연계해 보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정보도 및 3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충분한 취재와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중재부는 기사제목과 보도내용이 전혀 무관한데다, 진실보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액이 다소 과한데다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해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얼마 후 A씨 역시 B씨 입장에서 보도한 인터넷신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B씨가 신청한 사건과 같은 수준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액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해당 기사는 표현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했으나,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취재를 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당사자들은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소한 이웃간 갈등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만약 언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두 집안은 고삐사위를 잘 넘기고 지금쯤 좋은 이웃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